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배포) 2019.11.7(목)

**11월 8일(금) 10:00(차관회의 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팀      팀장 심정환, 전문위원 김민정  
(044-200-2454, 2459)

## 7차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눈에 띄는 제도와 사례 풍성’

- 9.26~11.8일간 차관회의에서 30개 기관 대표시책 및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 모범사례 벤치마킹, 내년도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반영해 범업 촉진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지난 9.26일 차관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30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실시했으며, 오늘(11.8) 서울시·보훈처·식약처·권익위·법제처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자	발표 부처
(1차) 9.26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2차) 10.4	해경청, 법무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3차) 10.11	관세청, 행안부, 국방부, 문체부
(4차) 10.17	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5차) 10.24	해수부, 고용부, 국토부, 여가부
(6차) 11.1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7차) 11.8	서울시, 보훈처, 식약처, 권익위, 법제처

- 이번 발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3월) 및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기관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를 차관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선정·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적극적 법령해석 및 개정을 통해 현장과 규정의 괴리 극복

- √ **(복지부)**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 발생 → 복지부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시·도의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 하여 시급한 위기가구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이후 규정을 개정

- √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 분유 제도업체가 투자·입주계약 체결했음에도 **규정상 입주자격이 문제되어 무산 위기** →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조건부 허용** 결정,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최대규모(1,700만불 상당) 외자 유치 지원
- √ **(식약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1개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을 도입 결정('19.7) → 창업비용 절감 등 효과, 고속도로 휴게소 35개소, 위국 30개소 등에 설치 예정 ※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식약처에 규제혁신 감사표시
- √ **(고용부)** 로컬 **JOB센터 사업**은 기존의 사업예산 기준이 다양한 지역특성으로 인해 사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획일적인 예산편성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샌드박스 유형을 신설, 사업 활성화**(취업자 257% 증가 등)

## ②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 √ **(환경부)**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 부족으로 폐기물이 적체 → **감염우려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토록 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히 조치** (법령상 위반여부를 사전컨설팅으로 해소), 이후 **법령 개정 추진**
- √ **(복지부)** 필수약품(안과 녹내장 관련)의 국내공급 중단 가능성이 발생, 퇴장 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려했으나, **일부 기준이 미흡** →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면책을 인정받고 신속히 조치하여 필수약품 공급 유지**
- √ **(서울시)** 민간의 유지책임이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안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민간의 조치가 지연** → **서울시에서 우선 조치하고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으로 확인, 시민안전을 위해 선조치 시행**

## ③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불편 해소

- √ **(국토부)** **창고업 등록기준**(1,000㎡이상)으로 영세 물류기업은 창고업 등록이 어렵고 화재보험 가입도 어려움 → 창고업계, 보험회사와 **특별약관**을 도입, 종전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18개 기업 가입 성과**
- √ **(해수부)** 수산물 수출증명서의 형식이 다양하여 온라인발급 곤란, 수출업체 불편 → **온라인 수산물 수출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하여 수출업체 편의 증진
- √ **(농식품부)** **양파 가격 하락** → 백종원 유튜브 양파 레시피 등 **새로운 홍보 방식** 시행, 또한 **검역절차·조건 등 간소화**하여 수출 지원
- √ **(행안부)**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국민 개방과정에서 **보안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소극적** → 안전,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상시개방 실시**('19.9), 기존대비 **4.5배 증가한 일평균 267명 방문**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행중인 적극행정 톺업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부서장이 앞장

- √ (해수부) 실국별 적극행정 선도과제를 1개 이상 발굴, 매월 점검
- √ (환경부)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추진 관리
- √ (행안부) 실국 부서장이 직원이 함께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 성공/실패요인 분석
- √ (중기부, 문체부, 인사처 등) 북 콘서트 등 기관장 다짐대회, 기관장 서신 발송 등
- √ (고용부) 본부 관리자를 소속기관별로 매칭, 현장소통관으로 지정해 애로사항 해결

### ② 적극행정 인센티브

- √ (해경청, 관세청 등) 매월 우수직원 선발, 쏠 직원들에게 시상식 생중계
- √ (문체부) 승진 심사시 승진자로 최우선 고려
- √ (산업부)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최고등급 사전확정 및 포상금 지급
- √ (인사처, 해경청) 실패사례라도 의미있는 경우에는 포상
- √ (고용부) 매월 우수사례 선발,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현장 발표회 개최

### ③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정비 등

- √ (환경부) 사전컨설팅 전담팀 설치로 제도 활용 독려 및 신속하게 처리
- √ (행안부) 부서내 적극행정 상담센터 설치, 운영
- √ (관세청) 내부 감사를 징계중심에서 잘한 일을 발굴·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
- √ (복지부) 국장급 2인으로 구성된 공감소통관 운영, 정책개선 및 개인고충 등 처리
- √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 TF 구성, 아이디어, 사례, 홍보방안 연구

### ④ 직원참여·소통 활성화 등

- √ (행안부) 격식, 업무경계, 결론이 없는 3無 아이스브레이킹 토론회
- √ (국토부) 부서별 적극행정 슬로건 제작 및 실천다짐으로 분위기 확산
- √ (인사처, 과기부 등) 5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 동아리 운영
- √ (국방부, 여가부, 환경부)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 공유를 위한 연구모임 운영
- √ (방통위) 주니어보드, 조직혁신 동아리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

## ⑤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조치

- √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개정, 기관별 추진방안 수립, 경영평가 반영
- √ **(행안부)** 쏘 지자체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지자체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운영
- √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별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 **(금융위)** 산하기관 적극행정 책임관지정, **음부즈만** 및 금융회사 방문 등 **현장소통반** 운영
- √ **(서울시)** 시민참여 규제발굴단 운영(100명) 및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 **(외교부)** 재외공관 **영상회의**를 통해 전파, 국립외교원 적극행정 신규과목 편성
- √ **(농식품부)** 소속, 산하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및 협의체 운영

- 국무조정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내년초 수립예정인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